‘해외직구’ 배송·수수료 과다에 관세 환급도 안돼

〈인터넷 통한 해외상품 직접 구매〉

일부 대행업체 반품·환불 관세 환급 착복

소비자 피해 사례 늘어 개선책 마련 시급

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가 일반화됐지만 반품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마땅히 돌려받아야할 관세 환급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관세환급 정보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8곳은 안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오픈마켓 입점업체 3곳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시 관세환급 불가’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건을 수입할 경우 ‘목록통관’(의류, 신발, VOD, CD 등 300여개 고시 품목)과 이를 제외한 ‘일반통관’제품으로 나눠 관세를 내야하는데 물품가격(물건값+해당국내 운송비+해외 부가가치세)이 150달러(일반통관)~200달러(목록통관) 이상인 제품에 관세로 20% 가량이 부과된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입했다 반품이나 환불할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도 못해보고 엄청난 반송료에다 많게는 수 십만원에 달하는 관세까지 손해봐야하는 셈이다. 더욱이 대행업체들이 제품을 구입하면서 업체명의로 통관했을 경우라도 관세 환급은 구매대행업체가 진행해야하지만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일반소비자들이 관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제품을 반품·환불한 뒤 관세를 환급받아 착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해외직구 매출이 1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연간 100%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입게되는 관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제도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법은 기업간의 계약 시 해당되는 법률로 개인간 거래로 구별되는 해외직구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해외직구가 아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을 따로 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유형으로 자리잡고,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관세 관련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과정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를 개인간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젠 도로명 주소 사용하세요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10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도로명 주소가 쓰인 스티커를 발급해 주며 ‘도로명 주소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0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열린 ‘안전관리 목표달성 결의대회’에서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안전관리 목표달성 결의가 담긴 패널을 들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재해없는 사업장 만들자”

안전관리 결의대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10일 연구소 대강당에서 ‘2014년 안전관리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 200여명의 임직원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안전관리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통해 ▲2014년 재해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활동 추진 ▲현장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안전관리활동 전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작업 전 스트레칭 생활화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 참여 등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하기로 했다.

또 전 임직원들에게 안전관리목표를 전파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위공장별로 안전관리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2014년 안전목표 달성결의내용이 담겨있는 패널을 각 부서별로 배포해 전 임직원의 자율안전관리활동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재미교포기업, 광양만권 2억달러 투자

호남출신 회장 ‘비즈포스트’

신대지구에 의료·교육 투자

호남 출신 회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비즈포스트그룹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팰리스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LA소재 한인 교포기업인 비즈포스트그룹 컨소시엄과 투자금액 2억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즈포스트 그룹은 2002년 미국 LA에서 설립돼 미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철광석과 소금 등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인 교포 기업이다. 이 회사는 미국 유수의 투자자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및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신대지구에 국내 병원과 합작으로 비영리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미국 의료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증 공인간호사를 양성하는 국제간호대학 설립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융거래 처음만 주민번호 … 징벌적 과징금 매출 3%로

정부,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 또한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사가 최초 거래 때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방식을 도입해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후 거래는 주민번호 대신 신분증 등을 이용하며 수집한 주민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한다. 주민번호 불법 활용 및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고객 정보 수집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 6~10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3자 정보 제공 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 거래 종료 후 신상정보는 3개월 내 파기하고 모든 보관 정보도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 정보 등 법령상 추가 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없애도록 했다.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면 관련 매출의 1%에 대해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절대 액수기준의 상한선이 없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정보 유출 시에도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보 유출 관련 형벌은 10년 이하 징역 등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신용정보사는 불법 정보 유출에 관련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게 되며 3년내 재위반시 허가가 아예 취소된다.

금융사의 보안대책 미비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기존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영업정지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금융사의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도 바뀐다. 필수사항 동의로 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54.42 (-20.26)	542.19 (-1.57)	2.88% (-0.01)	1066.50원(+5.90)

광주·전남중기청 ‘시니어 비즈플라자 주관기관’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7일까지 ‘2014년 시니어 비즈플라자 주관기관’ 및 ‘시니어 창업스쿨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유휴공간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소재 시니어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자문과 네트워킹 지원, 교육 등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전문경력을 보유한 시니어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주관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창업진흥원 또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062-360-911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